

[사회진보연대 공개 정세워크숍]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와 대남전략 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

○ 일시 : 2024년 3월 14일 (목) 19:00

○ 장소 : 사회진보연대 회의실

○ 발제

- 임필수 (사회진보연대 정책교육실장) 1

○ 토론

- 권수정 (민주노총 부위원장) 23

- 진기영 (평등의길 집행위원장) 27

[발제]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와 대남전략 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

임필수 (사회진보연대 정책교육실장)

1. 북한의 현단계 핵무기 전략·태세를 평가하기 위한 틀

- 미국, 소련과 비교해 봤을 때,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프랑스, (과거의) 남아공의 경우엔 △ 핵무기고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고, △ 핵무기 확산금지 체제라는 제약에 직면해 있거나, △ 민간정부-군대의 관계가 불안정하거나, △ 지역안보환경이 변덕스럽다는 상이한 조건에 처해 있었음. 따라서 그들은 핵 전략·태세를 신중하게 결정하여, 그들의 특수한 안보·정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역지력을 할당할 필요가 있었음. 즉 그들의 핵 전략·태세는 미국이나 구(舊)소련과 매우 달랐음. (영국은 미국과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별도의 분석 대상이 아님.)
- 미국, 소련의 핵 전략·태세는 대체로 대량보복, 신속반응, 상호확증파괴, 피해제한 등으로 알려졌는데, 핵무기 선제사용 능력과 충분한 보복능력을 포함. 그러나 다른 국가들은 핵능력, 관리절차, 투명성 수준에서 미국·소련과 상당히 다름.
- 비핀 나랑은 그들의 핵 전략·태세를 대략 ① 촉매형, ② 확증보복형, ③ 비대칭적 확전형으로 구분.¹⁾

1) Vipin Narang, Nuclear Strategies of Emerging Nuclear Powers: North Korea and Iran, *The Washington Quartely*, Spring 2015.

1) 신흥 핵무기국가의 핵전략·태세 분류

	촉매형	확증보복형	비대칭적 확전형
사례	1980년대의 남아공 1967-1991년의 이스라엘 1980년대 말의 파키스탄	1964년 이후의 중국 1974년 이후의 인도	1960년 이후 프랑스 1998년 이후 파키스탄
목적	핵보유를 공식화한다는 위협으로 후원국(미국)의 군사적·외교적 지원을 촉진	상대방의 핵공격에 대한 확실한 보복공격 능력 보유	상대방의 재래식 공격에 대한 핵무기 선제사용
핵보유 투명성	모호성 (완성된 핵무기가 없어도 됨)	투명성 (확실성)	투명성 (확실성)
2차 보복능력	없음	보유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전술핵무기	없음	없음	있음
선제공격 옵션	없음	없음	있음
아전사령관 핵무기사용권	없음	없음	있음
비고	핵보유를 공식화할 경우의 고강도제재를 회피	중국, 인도는 핵무기 선제 불사용 정책을 공식화	핵무기를 방패로 삼아 먼저 저강도분쟁을 개시할 수 있음

(1) 촉매형(catalytic): 1980년대의 남아공/ (어떤 점에서 1967-1991년의 이스라엘과 1980년 대 말의 파키스탄)

- 촉매형은 사활적 이익이 위협을 받을 때 제3자의 군사적·외교적 지원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남아공의 경우, 핵무기 보유 여부에 대해 인정도 부정도 않는 모호한 태도를 취했음. 그렇지만, 미국이 자국의 안보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핵무기 능력을 공개하겠다고(nuclear breakout) 압력을 가함으로써 미국의 지원을 촉진하고자 함.
- **제3자의 중재를 목표로 하므로, 매우 제한적인 핵무기 보유고로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심지어 핵무기가 완전히 조립되거나 작동할 필요도 없음.**
- 가장 중요한 특징은 ‘생존력 있는 2차 타력능력’(먼저 핵공격을 받은 후 보복공격 능력)이나 전술핵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는 점.
- 핵무기 보유 여부의 모호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핵무기 능력을 중앙집중적으로 통제하며, 핵무기를 국가의 공식적인 군사교리에 통합하지도 않음.
- 만약 적대국이 월등하게 우월한 핵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제한적인 핵능력으로 직접 적대국을 억지하려 들기보다는, 제3자의 지원을 촉진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음. 만약 직접적인 억지를 시도할 경우, 핵무기확산금지체제에 따른 고강도 제재라든가, 적대국의 예방적 공격과 같은 비용을 감수해야 함.

(2) **확증보복형(assured retaliation): 1964년 이후의 중국과 1974년 이후의 인도**

- 확증보복형을 실현하려면, 일정 수준의 피해를 보더라도, 적대국의 핵심 전략목표들에 확실한 보복을 가할 수 있는 '생존력이 있는 2차 타격능력'을 보유해야 함. (물론 보복이 반드시 즉각 이뤄져야 한다는 뜻은 아닐 수도 있음.)
- 생존능력은 △ 관리, 지휘통제 절차를 통해서나 (예를 들어 분산, 은폐, 기만), △ 기술적 수단을 통해서 (예를 들어 해양기반 핵능력, 예컨대 잠수함) 달성될 수 있음. 또한 상대방의 방어망을 뚫을 수 있는 확실한 보복수단을 보유해야 함.
- 확증보복형은 촉매형에 비해 핵보유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그래야만 적대국이 보복을 확신하여, 선제공격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낳기 때문. 물론 구체적인 배치상태는 모호하게 유지하여 생존능력을 높일 수 있음.
- 물론 확증보복형도 선제공격을 감행할 수 있음. 그러나 핵무기 배치 패턴과 사용 절차가 중앙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전장 수준에서 즉각적으로 핵무기 사용을 결정하기 어려움.
- 확증보복형은 '거부에 의한 억지'(deterrence by denial) 미션, 즉 적대국이 전장에서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미션보다는, 높은 가치를 지닌 적대국의 목표물을 파괴하는 '징벌에 의한 억지'(deterrence by punishment)를 추구함. 사실 '거부에 의한 억지'를 달성하기 위해 (전술)핵무기를 배치할 경우, 그러한 (전술)핵무기의 생존력이 떨어짐.
- 종합하면, **확증보복형의 특징은 '2차타격 능력'을 안전하게 보유하는 것이자, 전술핵무기는 보유하지 않는 것임.**
- 1964년 이후의 중국과 1974년 이후의 인도가 대표적 사례. 당시 **중국, 인도 양국은 핵무기를 선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선언**했고, 핵무기 운용절차를 볼 때 선제사용이 실제로도 어려웠음.

(3) **비대칭적 확전형: 1960년 이후 프랑스, 1998년 이후 파키스탄**

- 비대칭적 확전형은 **상대국의 지상 재래식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분쟁의 초기 단계에 상대국의 군사/민간 목표물을 핵무기로 선제공격할 수 있는 신속하고 비대칭적 확전 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말함.
- 재래식 공격을 확실성(credibility) 있게 억지하려면, (평상시에는 핵무기 배치가 중앙집중화 되더라도), **핵무기가 전투수행 수단으로서 운용 상태에 있어야 함. 따라서 비대칭적 확전형은 핵자산을 신속하게 분산하고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하며, 전장의 최전선에 있는 최종사용자(야전사령관)에게 핵무기 사용 권한을 사전에 위임해야 함.**

[표] 핵전력의 지휘통제체계 비교2)

	적극적 지휘체계 assertive command system	위임된 지휘체계 delegative command system
특징	△ 하급지휘관에게 최소한의 자율성만 부여	△ 하급지휘관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권한 부여
명령기제	△ 광범위한 통제 △ 군에 대한 민의 행정적 통제 뿐만 아니라, 기술적 통제 수단을 확보	△ 최소한으로 유지 △ 군에 대한 민의 통제는 행정적 수준에 그침
무기관리	△ 핵무기 미조립상태 △ 조립했을 경우, 탄두와 운반수단 분리 △ 탄두와 운반수단이 병치될 경우, 사용권한을 분리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을 확보	△ 무기조작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핵무기 발사 준비상태를 갖춤
장점	△ 사고, 부주의에 의한 사용 방지	△ 지도부 참수공격 등 위기시 빠르게 대처

- 비대칭적 확전형을 채택한 국가가 이론적으로 볼 때는 반드시 확증보복 능력까지 갖추 필요 없지만, 경험적으로 볼 때 그러한 능력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갔음. (그런데 북한은 반대의 길을 걷는다는 점에서 볼 때 특수한 사례임)

- 그런데 비대칭적 확전형은 상대국의 재래식 공격을 억지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으나, **현상변경을 추구하는 국가가 '비대칭적 확전 능력'을 방패로 삼아서 먼저 저강도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음.**

- **따라서 비대칭적 확전형은 핵무기 보유 국가가 추구할 수 있는 가장 공격적인 옵션.** 그것은 핵무기의 수적인 우위를 필요로 하지 않음. 오히려 핵무력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확실성 있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음.

-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비대칭적 확전형은 **핵능력, 배치패턴, 사용조건을 투명성 있게 밝혀야 함.** (즉 그래야 적대국이 비대칭적 확전을 믿을 수 있음.)

- 그런데 이는 상당한 지휘통제 압력을 낳으며, 의도하지 않은 핵무기 사용이라는 위험을 동반함. 이는 핵무기 작전관리에 광대한 비용과 긴장을 초래.

- 냉전기에 프랑스는 소련이라는 재래식 전력도 우세하고 핵무기도 보유한 국가의 위협에 직면. 프랑스는 소련군에 대한 핵무기 선제사용을 선포. 1998년 핵실험 이후 파키스탄도 인도의 우세한 재래식 전력을 억지하기 위해, 공공연하게 비대칭적 확전형으로 전환. (파키스탄은 오랫동안 2차 보복능력을 보유하지 않았음.)

2) 김보미, 「북한의 핵전력 지휘통제체계와 핵안정성」, 《국가전략》, 제22권 3호, 2016년.

2) 어떤 조건이 핵 전략·태세를 결정하나?

- 비핀 나라는 신흥 핵보유국이 핵 전략·태세를 결정하는 조건을 다음과 같이 도식화함.

- ①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후원국이 존재하는가?
→ 그렇다면, '축매형'
→ 그렇지 않다면, 다음 질문.

- ② 인접국의 재래식 전력이 월등히 더 우세한가?
→ 그렇다면, '비대칭적 확산형'
→ 그렇지 않다면, 다음 질문.

- ③ 민-군 관계는 어떠한가?
→ 적극적 지휘체계라면, '확증보복형'
→ 위임적 지휘체계라면, 다음 질문

- ④ 자원에 제약이 존재하는가?
→ 그렇다면, '확증보복형'
→ 아니라면, '비대칭적 확장형'

- 이를 다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1) 축매형을 선택하는 경우

-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후원국이 존재할 때: 파키스탄(1986-1991), 이스라엘(1966-1990), 남아공 (1979-1991)

(2) 확증보복형을 선택하는 경우

-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후원국이 존재하지 않지만, 인접국의 재래식 전력이 월등히 우월하지는 않고, 적극적 지휘체계를 구축하려 할 경우: 중국(1964-), 인도 (1974-)

(3) 비대칭적 확장형을 선택하는 경우

-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후원국이 존재하지 않고, 인접국의 재래식 전력이 월등히 우월한 경우: 프랑스 (1960-1991), 파키스탄 (1991-)

-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후원국이 존재하지 않지만, 인접국의 재래식 전력이 월등히 우월하지도 않은데, 위임적 지휘체계를 구축할 수도 있고, 자원의 제약이 없을 경우: 프랑스 (1991-), 이스라엘 (1991-)

(* 그런데 비핀 나라의 설명에서는 이 마지막 경우가 왜 등장하는지 설명이 없음. 인접국의

재래식 전력이 월등히 우월하지도 않은데, 왜 프랑스나 이스라엘은 1991년 이후 비대칭적 확전형으로 변화했는지.)

2. 북한의 핵 전략·태세는 어디까지 왔나?

1) 2020년대 북한의 핵 개발 흐름

(1) 2021년 1월 5-12일 조선노동당 8차 대회

-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기 고도화’를 선언: 핵무기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초대형 핵탄두, 1만 5천 km 급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극초음속활공비행체(HGV), 다탄두개별유도기술(MIRV), 중형잠수함 및 핵잠수함(SSN), 수중·지상 발사 교체형 ICBM, 수중 발사 핵전략무기(SLBM 또는 SLCM), 중장거리 순항미사일, 군사정찰위성 등 연구·개발 중인 무기까지 이례적으로 소개

[그림]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최우선 5대 전략과업’ 추진현황³⁾

과업내용	진행 상황 확인
핵무기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초대형 핵탄두 생산 지속	전술핵 완료, 영변 핵시설 및 우라늄 농축 시설 가동 * 김정은 핵물질/핵탄두 생산 확대 지시
15,000km 사정권내 명중률 제고 핵선제 및 보복타격 능력 고도화	화성 17형(액체), 18형(고체) 발사 성공 *김여정담화를 통해 정상발사예고 (대기권 재진입)
극초음속활공 비행 전투부 개발	2021.9.28. 극초음속미사일(화성-8형) 최초발사 2022. 1.5(2차), 1.11(3차) 시험발사
수중 및 지상 교체연료엔진 ICBM 개발사업 계획대로 추진	2022.12.15. 대출력교체연료엔진 지상분출 시험 *북극성5형 엔진으로 평가
핵잠수함 및 핵 SLBM 보유	8차 당대회시 연구종료 및 최종심사단계 주장 *추가 진행사항 미확인

* 군사정찰위성의 운영, 500km 전방 중심까지 가능한 무인정찰기의 개발 등을 추가 제시하였으나 지난해 공개한 핵무인수중공격정에 대한 언급은 미공개

* 북한에서 워싱턴DC까지의 거리는 대략 11000km.

- 북한이 열거한 무기들을 자세히 보면, △ MD(Missile Defence, 미사일 방어 체제)망을 뚫을 수 있는 무기, △ 저강도 핵탄두 탑재와 정밀도를 높여 실제 사용 가능성을 높인 무기, △ 상대의 선제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력 있는 무기, △ 선제 또는 보복 공격을 할 수 있는 은밀성과 기동성이 있는 무기, △ 미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주일미군이나 주한미군에게

3) 김동업, 「북한 군사 분야 평가 및 전망」, 『통일전략포럼 ‘2023년 북한 정세 평가 및 2024년 전망’ 자료집 2024-1』 (No. 73), 2024. 1.

보복할 수 있는 무기 등.

- 단순히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를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일 및 주한미군과 한반도 전역에 대한 생존력과 보복 능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

(2) 2022년 4월 16일 북한은 '신형전술유도무기'(화성 11-라)를 공개하고 시험발사

- 북한은 전술핵 운용 무기체계라고 주장

[그림] 2022년 4월 25일 북한 열병식에서 공개된 신형전술유도무기. 최대사거리가 110km 정도 인데, 강원도 평강군에서 쏜다고 가정할 경우 수도권은 물론 강원도 춘천, 고성, 속초, 홍천이 사정권에 들어감. 수도권 타격용 미사일인 셈.

<https://namu.wiki/w/%ED%99%94%EC%84%B1-11%EB%9D%BC#rfn-2>



(3) 2022년 4월 25일 김정은 위원장 핵 독트린 발표

- “우리 핵무력의 기본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 전쟁억지뿐 아니라 국가의 근본이익을 지키기 위해 핵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언급.

- 반면, 2016년 5월 7차 노동당 대회에는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적대세력이 핵으로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언급. 핵선제 불사용 원칙을 6년 만에 거둬들인 것으로 해석되었음.

(4) 2022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 채택

- △전문 △1. 핵무력의 사명 △2. 핵무력의 구성 △3.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4. 핵무기 사용 결정의 집행 △5. 핵무기의 사용원칙 △6. 핵무기의 사용조건 △7. 핵무력의 정상적인 동원태세 △8. 핵무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9. 핵무력의 질양적 강화와 개선 △10. 전파방지 △11. 기타

- 5조 사용원칙에서는 “비핵국가들이 다른 핵무기보유국과 야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이 나라들을 상대로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명시.

- 그러나 6조 사용조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열거

- 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륙무기공격이 감행되었거나 립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되었거나 립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국가의 중요전략적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공격이 감행되었거나 립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④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
- ⑤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핵무기로 대응할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 “즉 국가지도부나 전략적 대상에 대한 비핵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 (이것이 바로 앞에서 언급한 ‘비대칭적 확전형’으로 규정할 수 있는 바임.)

(5) 2023년 3월 28일, 조선중앙통신, 전술핵탄두 화산-31 공개

- 이를 탑재할 수 있는 8종의 무기에 대한 일러스트도 함께 공개.

[그림] 북한은 28일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 매체를 통해 소형전술핵탄두의 실물을 공개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뒤편에는 전술핵탄두 '화산-31'을 초대형방사포 등 8개 투발수단에 탑재한 그림을 의도적으로 노출시켰다. 조선중앙통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0671#home>



(6) 2023년 8월 31일, 북한 '남반부 전 영토 점령' 시나리오까지 포함한 '전군지휘훈련' 공개
 - 북한은 전날 남한 중요 지휘 거점과 작전비행장 초토화를 가상한 전술핵타격훈련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북한판 에이태컴스(KN-24) 2발을 고도 400m에서 공중폭발시켜 핵타격 임무를 수행했다는 것.

[그림] 북한군이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에 대응한 전군지휘훈련을 2023년 8월 29일 시작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날 훈련 현장을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의 핵심시설과 배치전력이 표시된 대형 작전지도 앞에서 지휘봉을 육·해·공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부근을 콧 짚으며 관련 지시를 하는 사진을 내보냈다.



(7) 2023년 12월 26-3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정은 위원장 “북남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입장을 새롭게 정립하고 대적(對敵)사업에서 단호한 정책전환을 할 데 대하여”, ‘국가방위력의 급진적 발전’ 방침 (다음 절에서 검토)

2) 북한의 핵 전략·태세는 어디까지 왔나?

- 북한의 최근 행태를 보면 ‘확증 보복형’과 ‘비대칭적 확장형’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음. ‘축매형’ 수준은 이미 옛날에 지나갔음.
-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에 이르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 역사를 보면 1990년대 후반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확보에 주력했음. 이는 미국을 잠재적 대상으로 하는 ‘확증 보복형’을 추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2020년대에 들어서에는 전술핵무기 능력을 과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비대칭적 확장형’으로 볼 수 있음. 이것이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가 따져보아야 함.

(1)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주변국들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협상용’이라는 시각은 더이상 통할 수 없음.

- ‘촉매형’이 함의하듯,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공개할 수 있다는 위협을 바탕으로, 중국의 안전보장을 촉구하거나, 또한 한국·미국·일본과의 외교정상화(국교수립)를 협상하거나, 6자회담과 같이 동북아 다자간 안전보장체제를 구축하려 한다는 시각은 이미 옛날의 것이 되었음. (2010년대 중반까지도 한국의 평화운동 내 일각에서는 이런 시각을 유지했음.)

(2) 그런데 북한이 ‘확증 보복형’이나 ‘비대칭적 확장형’을 추구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느냐는 문제가 있음. “미국의 적대정책이 궁극적인 원인”이라는 상투적인 시각을 넘어서, 1990년대 이후 한반도 정세를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음. 사실 1990년대 이후 한반도 정세는 김대중 정부 하의 ‘햇볕정책’이 장기지속 될 여건이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임.

- 먼저 중국이나 인도가 ‘확증 보복형’을 추구한 이유가 무엇이었나부터 생각해볼 수 있음. 중국이 핵보유를 결단한 중대한 계기는 1958년 ‘2차 대만해협 위기’(진먼(금문)섬 포격전)였음. 중국이 “진먼 섬을 해방할 것”이라며 대규모 포격전을 개시하자, 미국은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으나 7함대를 파견하여 주변에서 일종의 무력시위를 하고, 진먼 섬 방어전에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시사하기도 하였음. (하지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전술핵무기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게 나중에 문서로 밝혀짐.) 간단히 말하면 중국이 현상변경, 즉 대만통일을 추진할 때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핵개발에 착수한 셈.

- 인도가 핵개발을 결정한 중대한 계기는 1962년의 인도-중국전쟁(히말라야 일대의 국경갈등)에서 인도의 패배와 1964년 중국의 핵실험이었음.

- 다시 정리해보면, 중국과 인도의 핵개발은, 중국의 적극적인 현상변경(대만통일, 영토확장) 의지가 첫 번째 계기였고, 그 다음으로 중국과 인도의 영토분쟁이 두 번째 계기였음.

- 이에 비견해볼 때, 1990년대 북한이 ‘확증보복형’ 전략-태세를 추구할 이유가 없음. 1990년대 초반 한반도는 탈냉전의 기운 속에서 미국의 전술핵무기 철수, (남북기본합의서 체결과) 한반도비핵화 선언이 가능한 조건이 형성되었음. 북한이 현상변경(무력통일)을 추구하지 않는 한, 남한이나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여 현상변경을 추구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해도 무방한 상황이었음.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분명히 있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천했다고 한다면, 최소한 김대중 정부 하 ‘햇볕정책’이 장기적으로 지속했을 것임. 이는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부 하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임. (개성공단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지속했고,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 날이 갈수록 고도화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 시기에 폐쇄되었다.)

- 사실 이는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냉전 시기를 보더라도 사실인데, 냉전이란 인위적인 현상변경을 추진하지 않는 가운데, 직접적인 무력충돌 대신, 체제경쟁을 해보자는 의미였음.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선건설 후통일’을 내세웠는데, 사실 바로 이것이 냉전의 논리였던 셈. 사실 북한에 실제적 위협이 될 만한 일이 있었다면, 1970년대 초반 미국에서 주한미군 감

축논의가 나오면서 박 정부가 은밀히 핵무기를 개발하려 했던 계획이었음. 그러나 이는 미국이 가로막아 좌절됨.

- 좀 더 따져보면, 최소한 일손의 민족자결주의가 나온 후, 20세기 '미 제국주의'는 영토적 팽창을 목표로 삼지 않음. 자유무역, 자유기업이 가능한 국가 간 시스템을 구성하면 될 일이지, 직접적인 영토적 팽창은 무용하다고 본 것임. 그래서 19세기 말 20세기 초 제국주의 간 영토쟁탈전과 대비되는 개념이 필요하여, 20세기에 들어 '신식민주의'나 '신제국주의'와 같은 개념이 등장한 것임.

- 나아가 2020년대에 들어 북한이 급격하게 '비대칭적 확전형' 전략·태세를 갖추 필요도 찾기가 어려움. 물론 남한의 재래식 전력은 1970년대를 전환점으로 북한을 능가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일반적이지만, 그러한 재래식 전력차 추세가 2020년대에 갑자기 급변한 것은 아님. 2020년대 초반은 문재인 정부 시기이기도 한데, 이때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갑자기 군사적으로 호전적인 태도를 취한 것도 아님.

- 따라서 북한의 핵개발 현황이 '확증보복형'이나 '비대칭적 확전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이 이런 전략·태세를 추구하는 이유를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구조에서 찾기는 어려움. 다른 이유를 생각해보아야 함.

(3) 그렇다면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여기에는 몇 가지 추론이 있음.

① 한국이나 미국이 직접적으로 선제공격을 하지 않더라도, '아랍의 봄'처럼 민중봉기가 발생하고 그것이 내전으로 비화될 때, 외부의 이른바 '인도주의적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리비아 내전 당시 유엔의 비행금지구역 선포와 미국·영국·프랑스·아랍에미리트·카타르의 공습작전(오디세이 새벽 작전) 사례.) → 란코프 교수

② 김정일 위원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으로 권력승계를 위한 수단이었음.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외부에 과시함으로써 군사적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권력승계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잡음'을 차단하고, '핵무력 완성'을 새 지도자의 위업으로 선전함으로써 권력승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는 것. 이런 맥락에서 보면, 최근 북한의 의도적 긴장조성은 김주애로의 권력승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 → 주성하 기자

③ 한국이 직접적인 핵공격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킴으로써, 트럼프 정부 시기에 북한이 세웠던 '조선반도 비핵화' 구상, 즉 북한의 최소한의 핵동결·핵감축과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구상을 한국이 받아들이고 이에 입각해 미국을 설득하는 역할을 하고, 대북제재 해제 시 한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책임지라 메시지의 전달. (즉 문재인 정부 시기 대북정책의 부활.) 즉 한국이 북한에 대해 일종의 '조공국가'가 되라는 메시지.

- 어떤 이유든 간에,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정당화될 수는 없음. 3대세습에 이은 4대세습을 위해서

든, 민중봉기의 진압을 위해서든, 남한에 대한 ‘협박수단’이든 간에, 북한의 체제개혁이나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성보다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없음. (1980년대 말 한국의 좌파운동은 소련의 개방·개혁(글라스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사회주의 재생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음. 어떤 개방·개혁도 반대하는 보수적 태도를 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함.)

(4) 북한의 최근 핵 전략·태세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가?

- 앞에서 비대칭적 확산형이 가장 위험한 핵전략·태세라고 진단하면서 두 가지 근거를 제시

△ 현상변경을 추구하는 국가가 ‘비대칭적 확산 능력’을 방패로 삼아서 먼저 저강도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음.

△ 위임된 지휘체계에서는 핵 사용의 임계점이 낮아짐. 극단적인 경우, 현장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우발적인 핵전쟁의 가능성이 열림.

- 백승욱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시진핑 신시대-한반도 핵위기라는 ‘연결된 위기’를 상징. 현재의 국제정세 속에서 북한 핵의 위험이 극대화, 증폭된다는 주장.

“[한국의] 재래식 무기 우위가 [북한] 핵 앞에 무력해지고, 타깃 대상으로 서울과 평양이 대칭적이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고 (평양을 포기할 수 있다면), 지상전이 아닌 형태로 초단기에 공습 형태로 종료되는 전쟁이 가능하다면, 북한에 유리한 극단적 비대칭성이 확인될 수 있다. 실제 전술핵이 투하되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목표는 한국의 공납국화에 있을 것이다. 북한과 남한 사이에도 ‘일국양제’의 관계가 수립될 수 있는 것이다.” (『연결된 위기』, p. 324.)

- 한마디로 북한 최고권력은 평양시민을 희생시킬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즉 그런 일이 벌어져도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일종의 치킨게임(겉쟁이 게임)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는 뜻임.

- 좀 더 구체적인 시나리오도 제시하는데, 다음과 같다.

△ (대만-중국의 분쟁과 동시에 북한과 남한 사이에 국지적 분쟁이 이어지면서) 북한이 남한 중부, 남부의 공군기지를 대상으로 전술핵을 발사한다.

△ 북한은 평양이 공격받으면 미국 서부와 서울에 전략핵무기를 사용한다고 위협한다.

△ 그러면서 북한은 무조건 항복이나 상당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불응 시 (또는 평양 공격 시) 서울 핵공격을 위협할 수 있고, 수도권 지역 어디에 발사할 수 있다.

△ 협상에 응하면 일국양제의 연방제를 추진할 수 있다. 남한은 북한의 공납국으로 전환될 수 있다.

- 백승욱 교수 스스로 말하듯이, 이는 매우 극단적 시나리오지만, 일종의 ‘사고실험’으로서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바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특별군사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벌이고,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충돌이 고조되는 세계적 불안정이라는 국제정세가 한반도에도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국제정세 인식을 위해서도, 이런 시나리오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5) 결론적으로, 현재 국면에서 북한의 핵개발을 변호, 옹호하는 입장을 더는 용납할 수 없음. 북한 민중이나 남한 민중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측면에서도 긍정할 수 없음.

3. 북한의 통일정책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 23년 12월 26-3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정은 위원장 “북남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입장을 새롭게 정립하고 대적(對敵)사업에서 단호한 정책전환을 할 데 대하여”

- “우리[북한]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통일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것들과는 그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 “이제는 현실을 인정하고 남조선것들과의 관계를 보다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 남북관계에 대해 “더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다”

- “현실을 냉철하게 보고 인정하면서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사업부문의 기구들을 정리, 개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근본적으로 투쟁원칙과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 그에 따라, 1월 1일 최선희 외무상은 리선권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남대적부문의 기구들을 폐지 및 정리하고 근본적인 투쟁원칙과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

- 또 한편 ‘국가방위력의 급진적 발전’ 방침에서는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핵위기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나가야”한다고 강조.

1) 당면 남북관계에 미치는 함의

-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처럼 남한의 진보정부와 보수정부의 대북정책이 모두 북한 흡수통일에 있다고 평가하고, 남한을 ‘식민지 쫓개’로 비하한다는 것은 한국과의 어떤 대화도 전면적

으로 거부한다는 의미.

-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한 남북기본합의서의 규정을 부정하는 것.

- 이미 북한은 2023년 7월 1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8월 4일 정몽헌 회장 20주기를 계기로 추진 중인 금강산 방문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외무성을 통해 밝힘.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정부 간 대화 뿐만 아니라, 모든 접촉을 거부한다는 함의. 또한 ‘외무성’을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은 남북관계를 일반적인 국가 간 관계(즉 외무부의 업무)로 규정한다는 것.

- 그에 따라 통일전선부 기구를 축소하고, 통일부를 상대로 남북협상을 진행해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와 남한 민간단체와의 교류를 담당해온 민족화해협의회 등을 폐지하며, 대남 기구와 인원들을 외무성으로 이전.

2) 통일정책 변화의 의미

- 북한은 고려연방제통일방안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남한이 흡수통일을 폐기하지 않으므로 통일이 더이상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북한은 전통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듯한 수사를 활용.

- 그러나 북한이 이미 1990년대 초반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말할 때부터 한국 측의 국가연합안과 본질적으로 동일해졌고 (그래서 6·15공동선언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국가연합안에 공통점이 있다고 언급), 따라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란 통일방안이 아니라 ‘분단관리’ 방안이라고 우리는 해석한 바 있음. →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서는 남과 북 각각이 내정뿐만 아니라 국방·외교권한도 행사하는 데, 그렇다면 남과 북이 하나의 국가라고 말할 근거가 전혀 없음.

- 사회주의권이 최종적으로 붕괴하는 1990년대 초반에 이르면, 북한으로서는 수세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해석. 즉 북한이 남북 유엔동시가입을 결정했을 때는 이미 북한이 한반도 2국가 체제를 최종 수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북한이 2000년대 후반 ‘김일성 민족’을 들고 나왔는데, 이 역시 북한 주민을 ‘김일성 민족’으로 분리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즉 한반도 2국가 체제의 한 편이 김일성 민족이라는 것.

- 다만 남한의 통일운동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여전히 통일방안이라고 강변. △ 사실은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고 있었으나, 북한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북한의 레토릭에 담긴 모순을 공개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거나, △ 정말로 북한이 여전히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고 믿었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임.

- 과거 범민련 사무국장이었던 민경우 씨는 2000년대 초반, 북한이 통일운동은 더이상 중요하지 않다며 활동역량을 범민련과 같은 통일운동에서 민주노동당 쪽으로 이전하라는 지시를 내

렸음에도, 남측 활동가들이 그 함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설명하기도 함. 그래서 당시 전국연합 의장에게 이를 설명하고, 그 결과 ‘군자산의 약속’이 나왔다고 함.

3) 향후 남한 통일운동(NL운동)의 진로에 관한 예상

- 일단 가능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음.

(1) 북한은 남한의 흡수통일론 때문에 연방제통일을 폐기했지만, 유사시에 핵무력을 동원한 영토완정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를 일종의 통일론(즉 무력통일론)으로 간주하고, 현재로서는 통일의 유일한 방안으로 승인한다는 입장

- 6·15 남측위원회 토론회에서는 이런 입장을 노골적으로 말한 경우도 있음. (「북한의 “남조선 전 영토 평정”이 “그 자체가 통일”, “새로운 세계로 가려면 넘어야 할 강”이라는 자민통론자들」, 《사회운동포커스》, 2024년 1월 18일.)

△ 장창준 한신대학교 통일평화정책연구센터 소장

“‘대사변’은 ‘통일대전’과 다르지 않다. 북의 기본 인식은 평화적 방법에 의해서건 비평화적 방법에 의해서건 분단 문제는 한반도를 강제로 점령하고 있는 미제를 몰아내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싸움에서 북이 승리하면 그 자체가 통일이라는 의미”

“언론에서는 이번에 (북한이) 통일 정책을 포기했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오히려 북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통일 의지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인류사에서 구질서가 해체되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사실 굉장히 폭력적인 시기를 지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전쟁위기가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 터널은 지나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분단 체제라는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통일이라는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내는 것”

△ 손정목 통일시대연구원 부원장.

“한반도 정세가 대단히 심각하고 위험하지만, 전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 전체 인민을 위한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는 그걸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필연적인 강, 벽, 산을 넘는 중이다. 그 과정의 고통은 어쩔 수 없다. 쉽게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대사변’은 남쪽 분들이 ‘그럼 우리는 뭐하지’ 고민할 일은 아니다. ‘대사변’이란 전쟁을 통해 평정한다는 것이고 그 자체가 통일이다. 남쪽에 어떻게 조치를 하냐는 그 뒤의 이야기니까 그걸 우리가 고민하면 머리 아프다”

- 그러나 공개된 연단에서 이런 주장을 앞으로도 공공연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임. 현실에서는 반미반일운동을 중심으로 활동을 재편하고자 할 것임. 최근 범민련 해산의 함의하는

바도 그러함.

[그림] 범민련 남측본부가 17일 낮 12시 해산총회와 새로운 전국적 반제자주운동연합체 건설 결의 대회를 갖고 35년 만에 닳을 내렸다. 남측본부는 가칭 한국자주화운동연합을 결성해 반제자주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066>



(2) 북한은 남한의 흡수통일론 때문에 연방제통일을 폐기했다고 하지만 남한의 통일운동은 연방제 통일이 유일무이한 합리적 통일방안이기 때문에 이를 지켜야 한다며, 통일운동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보는 입장

- 특히나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전대협-한총련-범청학련 세대는 ‘조국을 연방제로 통일하자’가 강력한 정치적 정체성으로 형성되어 있음. 그들은 연방제 통일방안을 무조건적으로 이상화했는데, 그 세대들이 자신들의 과거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음.
- 그런데 이런 방식의 통일운동은 북측의 파트너를 상실함에 따라, 활동 동력을 점점 더 잃어갈 가능성이 높음.

(3) 반미·친북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평화적인 2국가 체제’를 주장할 수도 있음.

- 1.31. 진보당 주최 한반도 정세 국회토론회, 정태흥 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장 발언.
 “북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국가로 규정을 했는데, 아무리 국제정세가 변화되고 남북관계가 강대강 대결에 있다 할지라도 남이든 북이든 민족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반대다. 그 어떤 법률이든 군사 훈련이든 말폭탄이든, 남과 북이 서로에 대해서 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 안 될 일이고, 남과 북은 전쟁은 절대로 불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반대다.”
 “진보당은 외교정책에서 현재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신냉전이나 다극화나 등으로 국제질서가 대전환되는 국면에서 진영외교는 안 된다. 비동맹 중립외교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냐 생각하고 있다. **적대적 두 국가가 아니라 평화적 두 국가로 가자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당면해서는 종전선언, 평**”

화협정 체결로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남북을 포함해서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이 신냉전으로 갈 것이 아니라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를 형성하는 데 한반도가 기여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기본 원칙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 정태흥 씨는 1990년대 학생운동 당시 한총련을 범민련의 범민족대회가 아니라 민족회의(문익환 목사의 새로운 통일운동체) 8·15 행사로 이끌었던 학생운동 그룹의 지도자였음. (사실 이와 관련된 역사는 매우 복잡하고 미묘함.) 문익환 목사는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이나 국가연합안이 반드시 통일에 역행하는 게 아니라, 통일로 가는 단계라고 생각했음. 이는 한반도 2국가 체제와 동전 하나의 차이로 볼 수도 있음.
- 다만 정태흥 씨의 주장이 진보당의 공식 당론인지는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듯.

4) 필자의 평가

- 최근 북한의 입장을 일종의 ‘무력통일론’으로 보고 통일방안으로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음. 연방제 통일론을 고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어진 지 수십 년이 지났음.
- 마지막으로 남는 문제는 정태흥 씨와 같은 ‘평화적인 2국가 체제론’임. 일종의 ‘햇볕정책의 장기지속’ 상태인 평화적인 2국가 체제는 사실 한국사회 전반이 이미 승인한 상태로 볼 수 있음. (햇볕정책에 대한 대중적인 지지, 북한이 비핵화를 유지하는 한 보수세력도 사실상 승인.)
- 그런데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러한 평화적인 2국가 체제의 길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점. 정태흥 씨가 ‘비동맹 중립외교’를 전제로 하는 것이, 남한이 그렇게 한다면 핵을 보유한 북한과 비동맹 남한이 평화적인 2국가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그리기 때문일 수 있음.
- 그러나 핵을 보유한 북한이나, 그런 북한과 경제교류를 하는 남한이나 모두 세계적인 핵무기비확산 체제 하에서 제재를 당할 수밖에 없고, ‘실패한 국가’로 가는 길밖에 없음. 남북이 모두 제재를 당하는 상태에서 중국이나 러시아에 의존해서 국가적 생명을 이어가는 상태가 평화적인 2국가 체제인지, 그것이 과연 남한과 북한의 민중이 원하는 상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음.
-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는 어불성설임. 중국과 러시아의 우산 밑으로 들어가는 길 외에는. (이것이 바로 백승욱 교수가 말한 ‘공납국화’의 한 가지 형태일 수 있음.)
- 이런 사실을 고려할 때, 정태흥 씨와 같은 입장은 북한 핵문제에 대한 입장도 분명하게 밝혀야 그 진의를 파악할 수 있음. 다시 강조하면,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라면, 남북 간의 평화적인 2국가 체제라는 그의 주장 역시 공허한 상상일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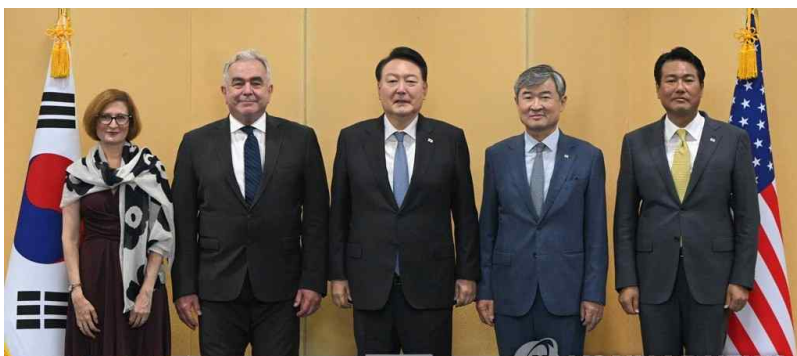
4.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핵정책을 어떻게 볼 것인가?

1) 2023년 4월 26일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핵협의그룹(NCG) 창설

- 2023년 4월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 채택: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된다”고 명기.
- 한미핵협의그룹(NCG) 창설: “양 정상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핵협의그룹(NCG) 설립을 선언하였다.”
- 또한 정례적으로 ‘확장억제 수단 운용연습’(TTX)과 ‘핵 대응 도상연습’(TTS)을 실시하고, 한반도 인근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확대하여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를 발휘하도록 할 것이다.
- 2023년 7월 18일, NCG 첫 회의 개최, 공동언론발표문: 양측은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개발,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소통 체계, △관련 기획, 작전, 연습, 시뮬레이션, 훈련 및 투자 활동에 대한 협력 및 개발 등 다양한 업무체계를 확립하였다.

[그림]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7월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에서 커트 캠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 정책 조정관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카라 아베크롬비, 커트 캠벨, 윤 대통령,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https://www.yna.co.kr/view/PYH20230718083700013>



- 2023년 12월 15일, 2차 NCG 회의 후, 김태효 차장, “2024년 8월 을지자유의방패(UFS) 훈련 등 한미 연합 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해서 함께 훈련할 계획”
- 북한의 전면전에 대비한 한미 연합 작계(작전 계획) 5015에는 핵 보복(핵우산)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음. 북한의 대남 핵 공격 시 미국의 확장 억제(가동되려면 3대 핵 전력(전략핵폭격기, 전략핵잠수함,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핵무기를 총괄하는 미 전략사령부의 작계가 가동돼야 하는데 이는 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 권한 밖. 이 때문에 지금까지는 주로 한국군 무기를 활용하는 재래식 전쟁 작계와, 미 핵 전력(확장 억제) 작계가 따로 작동. NCG 합의에 따라 한국군의 재래식 무기와 미국의 핵무기를 통합해 운용하는 연습을 실시.

[그림] UFS훈련 변화 예상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31218/122666676/1>

현 한미 연합작전계획-내년 한미 훈련 때 첫 적용 미 핵전력 운용계획	
	한미 연합작전계획
목적	북한 전면 도발 시 재래식 전력 대응
적용 시기 및 내용	매년 상·하반기 연합연습 ※북한의 핵공격 시나리오 제외
수행 주체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

+

한미 훈련에 추가된 미 핵전력 운용계획	
목적	북한 핵공격 시 미 핵전력으로 핵보복
적용 시기 및 내용	내년 8월 연합연습에서 첫 적용 ※북한의 핵공격 시나리오 포함
수행 주체	한미 공동 기획 및 실행

2) NCG 합의의 의미

- 북한은 2022년 4월 전술핵무기 ‘운반수단’을 공개하고, 2023년 3월 전술핵무기 ‘탄두’를 공개. 남한을 전술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다는 게 실제 상황임을 거듭 강조한 셈.
- 그에 따라, 만약 북한이 전술핵무기를 남한에 사용할 경우, 미국의 핵우산이 정말로 퍼지겠냐는 의구심이 확산. 즉 북한이 미국도 전략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다면, 미국이 한국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 (위에서 백승욱 교수가 제시한 ‘극단적’ 시나리오도 이와 같음.) 그러면서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거나,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곳에서 나오기 시작했음.
- 그런데 독자적인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는 한반도비핵화 선언에 위배된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 한미 간의 합의는 한반도비핵화 선언의 경계 내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물론 북한이 이미 한반도비핵화 선언을 폐기한 셈이므로, 한국도 폐기해도 된다는 게 독자 핵무장론이나 전술핵재배치론의 전제이지만, 사회운동의 관점에서도 한국도 한반도비핵화 선언의 한계를 넘는 행동을 인정할 수 없음.
- 다만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는 두 가지 맹점이 있었음.

첫째, 남한은 한반도비핵화 선언이 지상 시설에만 적용된다고 주장. 즉 핵무기를 탑재하고 있는 군함이 영해로 들어오거나 항구에 정박하는 것이라든가, 핵무기를 탑재하고 있는 군용기가 (착륙하지 않고) 영공으로 들어오는 것은 비핵화선언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주장.

→ 한미정상회담에서 밝힌 “한반도 인근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확대하여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를 발휘하도록 한다”는 계획은 이를 활용하는 것.

둘째, 한반도비핵화 선언은 미국의 핵우산(확장억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음. 이는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에 이르러서야 문서로 명기됨.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를 불위협 또는 불사용에 관한 공식 보장을 제공한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일관성 있게 취한다.”

→ 그러나 북미 제네바합의 역시 북한의 비핵화선언 불이행으로 인해 폐기된 상황.

- 따라서 사회운동이 희망하는 더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는 장차 이런 문제까지 다뤄야 함.

- 한편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중적 입장이 나옴. 대표적으로 안민석 의원은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자체핵무장 카드를) 계속 쥐고 있으면서 협상용으로 썼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이 카드를 포기해 버렸다”고 하는가 하면 “북한이 핵으로 공격하면 핵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것인데 한반도는 핵 전쟁터가 되고 우리 민족은 말살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함. 남한이 독자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북한 핵에 대해서 핵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서로 모순된 주장을 동시에 펼침. 이는 현 정부를 무조건 깎아내리려는 의도로밖에는 해석하기 어려움.

- 또 한편 최근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의 전쟁 조장, 한반도가 위험하다!”라는 제목의 카드 뉴스를 발간. 3월 4-14일 진행되는 한미연합군사연습 ‘자유의 방패’에 대응하기 위한 것.

<https://nodong.org/paper/7850091>



- 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전쟁조장”은 너무 일방적인 주장. 일단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실질적 합의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동시 중단”을 먼저 파기한 것은 북한이고 결정적인 계기는 2022년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였음.

- 북한이 남한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전술핵무기 프로그램을 진척시키고 있는 와중에, 그에 대응하기 위한 남한 쪽의 움직임만 ‘전쟁조장’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일방적.
- 최소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싱가포르 합의),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재개’를 주장해야 타당함.

3) 윤석열 대통령 3·1절 경축사와 통일정책

- 최근 북한의 통일정책 변화에 맞대응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3·1절 경축사에서 통일을 유독 강조.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입니다.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우리의 통일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탈북민들이 우리와 함께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따뜻하게 보듬어 나갈 것입니다.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역사적,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통일을 추구하는 것이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 단계에서는 북한 인권 개선, 탈북민 지원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약속.
- 윤 정부는 8월 중에 새로운 통일방안을 제시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함.
-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유와 인권의 확장으로서의 통일”을 강조함으로써 흡수통일론을 제시했다고 평가하기도 함. (“남북·과거사 해법 없는 윤 대통령 3·1절 기념사, ‘공허한 독백’이다” 《경향신문》, 3월 1일/ “이념적 통일 방안 아닌 평화적·단계적 통일 방안 세워야”, 《경향신문》, 3월 3일)
- 그러나 과거 햇볕정책을 추구한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방안에서도 평화공존, 국가연합 단계를 넘어 통일로 가는 길에서는 북한이 다당제와 자유시장경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 경향신문의 기준으로 보면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방안도 흡수통일론.
- 흡수통일론은 인위적으로, 적극적으로 북한의 ‘레짐체인지’를 유도하거나, 무력을 동원한 ‘영토완정’을 시도하는 경우로 해석해야 타당. 그러나 현 정부나 앞으로 등장할 정부가 이를 실행할 의지나 수단이 현실적으로 존재할지는 의문.
- 앞에서 언급했듯이,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장기적인 햇볕정책’(분단관리)가 실상 남한의

보수정당이든, 민주당이든, 심지어 진보정당도 수용한 대안이었음.

- 물론 이런 햇볕정책도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점진적으로 유도한다는 구상이 깔려 있었음. 남북 간의 경제협력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남과 북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경제성'이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북한의 경제 법제·관습이 모두 바뀔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 사람은 다름 아닌 노무현 대통령이고, 그것이 곧 '평화번영정책'의 골자였음. (그렇지만 북한이 이를 달가워한 것은 아닌데, 북한이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에 비해 노무현 대통령의 방북에 냉랭하게 대한 것도 이런 사정이 있었음.)

- 당시 사회진보연대는 장기적인 햇볕정책 국면에서는 경제협력이 본격화되고 남한의 자본이 진출함에 따라 (한국 자본의 해외진출에서 나타나는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노동권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고, 또한 평화군축의 진척이라는 문제도 대두될 것이라고 관측. 즉 햇볕정책의 이면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 셈.

- 어쨌든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동안, 보수정당이든 민주당이든 누가 집권하든간에 실제적인 의미에서의 '흡수통일'을 추진할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어려움. (남한 국민이 원하는가?)

- 다만 북한 인권문제나 탈북민 문제에 있어서는 보수정당과 민주당의 입장 차이는 예상할 수 있음. <끝>

[토론]

전쟁위기 고조되는 한반도정세,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권수정 (민주노총 부위원장)

1. 국제정세

- 미국의 패권 약화를 확인하는 국지전



- 달러패권 약화

-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미국이 러시아를 국제금융결제시스템(SWIFT)에서 차단

- 러시아는 위안화결제시스템(CIPS)⁴⁾ 사용, 유럽에 수출하던 가스를 중국과 인도에 수출

- 브릭스 부상

- 브릭스 국가 ;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 남아프리카공화국 + 아르헨티나,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연합

- 세계인구의 47%, 석유생산량 48%

4) 위안화결제시스템은 2022년말 103개국, 1,280개 은행이 사용

브릭스(BRICS) 회원국 현황

8월 24일 현재

신흥경제 5개국 협의체

- 2009년 브릭(BRIC)으로 출범
- 2010년 가입
- 2023년 8월 24일 가입

BRICS

*사우디 등 22개국 가입 요청



자료: 브릭스, 남아공 국제관계협력부(외무부)

연입뉴스

2. 동북아 정세

- 중국과 미국의 패권이 충돌
- 대만 총통 선거에서 친미 차이잉원 당선 후 시진핑 대만 통일 발언
- “평화통일 기본방침.... 무력사용 옵션 포기안해” 2024.3.13. 천빈화 대변인
- 러중북 : 한미일 진영의 대립 격화

3. 한반도 정세

- 전쟁위기 고조
- 2023년 4월 2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 설립 합의
- “2024년 8월 을지자유의방패(UFS) 훈련 등 한미 연합 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해서 함께 훈련할 계획” 2023년 12월 15일 2차 NCG 회의후 김태효 차장
- 2023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 “더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다.”
-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핵위기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4. 우리가 해야 할 것 - 반전반핵평화 운동

- 전쟁과 핵무기의 위협을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중요하지 않다. 남의 윤석열도 북의 김정은도 전쟁과 핵의 사용 가능성을 열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 전쟁은 안하면 좋고, 하면 어쩔수 없는 것이 아니다. 일국의 지도자가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자기영토의 전쟁이다.
- 전쟁은 대규모 학살이기 때문이다. 특히 핵은 학교와 병원과 아파트와 차와 나무와 사람을 피해가지 않는 초토화의 파괴와 몰살이다.
- 한반도 정세를 얘기하며 세계비핵화로 결론 짓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하지 말자는 말

5. 전쟁으로 누가 죽고, 누가 이익을 보는가?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죽은 이들은 노동자민중이고, 이익은 미국의 가스자본과 무기 자본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천연가스를 둘러싼 전쟁
- 중국은 위안화 패권을 확장하며 이익, 인도는 값싼 천연가스를 매입하며 이익
- 한국의 무기자본 ; 피의 잔치
-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표한 세계 매출 100대 무기회사 중 한국 4개
- 한화에어로스페이스(48위), LIG넥스원(67위), 한국항공우주산업(73위)에 이어 현대로템(98위)
- 방산 4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특수로 65~75% 기록적인 연간 주가 상승률
- 탄약, 자주포, 전차, 장갑차, 방공체계, 지대공미사일의 유럽 수요 높음

Table 1. Selected producers of weapons in high demand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during 2022

Rank in Top 100	Company (country)	Selected weapons supplied to European countries and the United States	Change in arms revenue, 2021-22 (%)
1	Lockheed Martin Corp. (United States)	ABMs; artillery; ASMs; ATGMs; SAMs; SSMs	-8.9
2	Raytheon Technologies (United States)	Air defence systems; ATGMs; radars; SAMs	-12
5	General Dynamics Corp. (United States)	Ammunition, armoured vehicles; portable SAMs	-5.6
6	BAE Systems (United Kingdom)	Ammunition; armoured vehicles; ASMs; ATGMs	0.0
17	Thales (France)	Air defence systems; ATGMs; SAMs	2.5
24	Elbit Systems (Israel)	Ammunition; artillery	4.0
28	Rheinmetall (Germany)	Ammunition; armoured vehicles; artillery	6.0
32	MBDA (Trans-European)	Air defence systems; ATGMs; SAMs	-7.3
35	Israel Aerospace Industries (Israel)	UAVs	5.5
39	Saab (Sweden)	Ammunition; ASMs; ATGMs; portable SAMs	-0.5
42	Rafael (Israel)	Air defence systems; ASMs; ATGMs; SAMs; SSMs	12
44	KNDS (Trans-European)	Ammunition; armoured vehicles; artillery	11
48	Hanwha Aerospace (South Korea)	Ammunition; armoured vehicles; artillery	-8.5
57	Oshkosh Corp. (United States)	Armoured vehicles	-22
67	LIG Nex1 (South Korea)	Air defence systems; SAMs	16
71	PGZ (Poland)	Ammunition; armoured vehicles	14
76	Baykar (Türkiye)	UAVs	94
83	Kongsberg Gruppen (Norway)	Air defence systems; SAMs	12
93	Diehl (Germany)	Ammunition; air defence systems; SAMs	13
98	Hyundai Rotem (South Korea)	Armoured vehicles	13
100	Roketsan (Türkiye)	Ammunition; ASMs; ATGMs; rocket launchers	17

ABM = anti-ballistic missile; ASM = air-to-surface missile; ATGM = anti-tank guided missile; Corp. = corporation; SAM = surface-to-air missile; SSM = surface-to-surface missile; UAV = unmanned aerial vehicle.

Source: SIPRI Arms Industry Database, Dec. 2023.

- 방산업체 단체행동권 인정되지 않아 노동3권 보장되지 않음
- 방산업체 조합원들과 반전반핵평화 투쟁을 할 수 있을까?

6. 민주노총 통일위원회의 반전반핵평화 위원회로의 재편이 필요하다.

- 통일을 해야 하나? 전쟁없이 통일을 할 수 있나?
- 없다.
- 그동안 통일운동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
-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민족의 통일이라는 낭만에 대하여
- 북조선 노동자계급의 상태를 설명하고, 그 해방을 위한 통일을 들어본 적이 없다.
- 개성공단이 사업을 시작한 2006년 노동자들 임금 월50달러(당시 환율로 6만원 수준), 해마다 5%씩 인상해 2015년 철수할 때 73.8달러. 잔업특근하면 월 20만원 수준. 2015년 대한민국 최저임금 월 116만 6천원.
- 한민족의 통일은 누구를 위한 것이거나 하나?
- 남과 북이 서로 국가임을 인정하고, 국경을 열어 교역과 교류하는 평화적 외교가 필요할 뿐
-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기초한 요구가 필요하다.

참고>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1992. 2. 19. 발효)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 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사용한다.
3. 남과 북은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4.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 핵 통제 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5.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안에 남북 핵 통제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6.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본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 1. 20.

7. 79차 대의원대회에 제출된 수정동의안이 중요한 이유

국제·한반도 정세와 민주노총의 과제 단락의 수정동의안

- 민주노총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한다”는 강령과 “전쟁과 핵무기의 위협에 맞서 항구적인 세계 평화를 실현한다”는 강령을 재확인하며, 고조되는 한반도 전쟁 위기와 핵 위협에 맞서 한반도에서 핵무기의 생산·반입·사용, 폭격기와 잠수함 등 핵자산 전개와 핵전쟁 훈련에 반대함.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전쟁과 핵무기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연대를 강화함
- 전쟁으로 인한 학살과 파국을 막기위한 최소한의 양심과 요구

[토론]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에 대한 단상

진기영 (평등의길 집행위원장)

1. 전쟁이 부르는 참상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2년이 지난 지금시기 가장 고통받는 이들은 여성과 어린이 들임. 전쟁 2년간 양국간 전쟁에 의한 순수 민간인 사망자가 1만명에 육박 한다고 함. 우크라이나의 주장임을 전제로 침략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서 전쟁범죄가 12만건에 육박한다고 함.
- 더불어 노동자들은 전쟁의 최대 희생자들로서 전선에서 죽어가고 있음.(출처의 정확도는 떨어져나 우크라이나 발표에 의하면 군인 사망자가 3만 1천명이상, 러시아는 미확인)
- 인구 3천 7백만명중 난민 7백만명. 더군다나 우크라이나의 금전적 손실 1천5백5억 달러(한화 약 195조 6천5백억)에 달할 것으로 전망(키이우 경제대학 연구진 발표, 2023년 8월 7일 AP뉴스 참조)
- 어떤 전쟁도 민중과 노동자들에겐 재앙임.
- 제 2차 세계대전 참전국 중 최대 사망자가 발생한 러시아(약 2천7백만명)가 일으킨 패권주의 국가의 단상을 보면서 참담할 따름 임. 국제 평화와 반전운동이 왜 필요한지를 가늠해 볼 수 있음.
-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의 전쟁. 어쩌면 핵무기 없이 재래식 무기와 첨단 무기에 의한 전쟁임에도 사망자와 피해자들의 삶은 처참하기 그지없음.

2. 핵전쟁의 잔혹함

- 2023년 2월 튀르키예 지진 : 히로시마 원폭 32개의 위력
- 즉 최초의 원자폭탄(현시기 핵폭탄에 비하면 그 위력이 매우 적을 것임에도) 투하의 현장인 일본 히로시마 원폭 32개의 위력이 튀르키예 2023년 2월 지진과 맘먹는 위력.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5만 2천명, 이웃 시리아 최소 6천명. 실종자는 아직도 튀르키예 정부가 공식 발표를 안하고 있음.
- 튀르키예 400만채 건물 파손, 피해 주민들 대다수가 1년이 넘도록 돌아갈 곳이 없는 참혹한

상태 임.

- 지진이후 1년이 지난 현재 가장 큰 후유증은 살아남은 사람들의 트라우마 임.

3. 한국전쟁과 핵무력에 대한 공포

1)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서 벌어진 사실상의 제 3차 세계대전. 이로인한 피해

① 군인 피해

국가별	사망자 수(명)	부상자/포로,실종(명)	총 인명피해 수(명)
남한군	13만	45만	62만
북한군	52만	12만(포로,실종)	64만
UN군	4만	10만	15만
중국군	18만	82만(포로,실종)	100만
총계	87만	149만	241만

② 민간인 피해

	학살(명)	사망(명)	행방불명(명)	부상(명)	총 인명피해(명)
남한	13만	24만	30만	23만	99만
북한					150만
총계					245만

③ 그 외 인명피해

- 전쟁고아 및 홀로된 여성 수 십만 명, 이산가족 1천만 명

④ 물적피해

- 당시 2년치 국민총생산액(1950년 GDP 13억달러)

2) 핵무기 사용에 따른 전쟁의 위험? - > 절멸(絶滅)의 시대 !

- 전쟁이 가져올 공포와 피해는 인류가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진보운동의 절대적 가치이어야 함,

- 전쟁의 피해는 앞서 언급한 한국전쟁,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았듯이 좌파운동의 방향과 실천은 반전반핵 한반도 평화운동으로 자리메김 해야 함.

4. 민주노조 운동과 반전운동의 상관성

1) 민주노총 강령의 실천 및 강령 개정의 필요성

① 민주노총 강령

- “우리는 전세계 노동자와 연대하여 국제노동운동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을 신장하며, 전쟁과 핵무기의 위협에 맞서 항구적인 세계평화를 실현한다.”

- 1945년 해방이후 남한을 여전히 미제국주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민족주의 운동 세력의 남한내 반미 정서에 의한 통일운동 세력의 궤도 수정이 불가피 해 보이지만, 발제자의 발제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김정은은 남북한을 별도로 두 개의 한반도 국가로 규정하고 남한을 무력에 의한 대립 국가의 위상으로 자리매김 한 상태로 판단 됨.
- 통일의 관점이 아니라 전쟁위기 고조를 통한 북한 체제 구축 및 안착화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면 현 민주노총 집행부의 북한에 대한 태도는 민주노총 강령의 지향과도 맞지 않음.

② 강령의 수정 필요

- 가장 전쟁의 위험과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높은 한반도의 상황을 봤을 때 ‘반전반핵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대한 방향성으로 개정의 필요하다고 판단 됨.

2) 민주노조 운동의 과제

- 하나의 민족, 통일된 국가 -> 각자 다른 두 개의 국가 인정. 종전선언. 평화체제 구축 지향
- 전쟁으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민중들과 노동자들이었음.
- 특히 핵무기 사용으로 인한 절대적 피해는 ‘피해’를 넘어 ‘절멸(絶滅)’의 시대를 초래 할 것임.
- 산별노조의 시대가 과연 오기는 올 것인지 의문(?)이긴 하지만, 노동운동의 과제는 사회운동 노조의 과제로서 반전반핵 한반도 평화 운동에 대한 고민과 실천이 절실한 상황이라 할 것임.
- 민주노총의 통일위원회를 반전반핵평화위원회로의 명칭 변경과 활동 내용의 궤도 수정도 필요함.
- 이를 통한 일상적 교육과 평화운동의 일상적 실천으로 만들 필요가 있음. 노동자 평화대회 같은 것도 구상해 볼 수 있음.